

“예비후보 등록 2개월 연장 부작용 우려”

2주내 선거법 개정 되어야 13일부터 적용...사실상 불가

“현역 국회 등한시·정치신인 선거비용 급증” 의원들 반발

여야 대표의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잠정 합의를 놓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연장’과 관련하여도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국민공천제 실시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신인·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다. 국민공천제와 가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당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양당 대표 합의대로라면 예비후보 등록은 당장 2주일 내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10월 13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놓고 여야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태에서 여야 대표 합의가 수용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양당 모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과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도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주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이 도입되더라도 많은 부작용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2개월 앞당길 경우 한 해 가장 중요한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챙겨야할 시기에 상대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구를 누르고 다니면 신경이 쓰여 제대로 지역예산을 챙길 수 있겠느냐”면서 “여야 대표 합의의대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2개월 연장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연말 예산 국회 등 바쁜 의정활동을 등한시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발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한 입지자

는 “정치 신인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린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짧을 수록 선거비용만 더 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후폭풍이 여야 모두 만만치 않아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하다”면서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 문제 역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볼 때 10월 13일은 어렵지만 만약 여야가 당내 합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진인사 심고초려”

천정배 이달중 창당 추진위 구성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30일 “신진 인사들을 모으는 일에 삼고초려를 넘어 심고초려까지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면서 “10월중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분들과 함께하려 한다. 확답을 준 분도 계시고, 많은 분과 교감을 이루고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력적인 신당이 되려면 개혁적 정치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추진위 윤곽이 나오면 (영입인사들도) 함께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를 거론하며 “당 미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안 전 대표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안 전 대표의 당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혀 안 전 대표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공천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지 않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불출마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패권을 뒷받침하는 인사들에게 희생하게 한 뒤에야 반대파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이종걸 의원 세미나서 조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포럼 국민공감 발족식 및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근식 포럼 국민공감 상임대표. /연합뉴스

국감, 오늘부터 후반전

노동 개혁·교과서 국정화 2라운드

국회는 추석연휴를 전후해 일주일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 1일 국정감사 후반전에 들어간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 기관으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주지방공용노동청이 각각 국회(농수축위)와 부산(환노위)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과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한 동력을 끌어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FTA 비준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계

획과 경제민주화를 부각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민생경제 위기를 파헤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데 후반전 당락을 집중할 태세다.

여야 모두 후반기 국감에선 활약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당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반기 국감 못지않은 ‘팽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의 공약이며 여야 모두 당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점차 국감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이슈

“4대 항만공사 전·현직 임원 절반 해수부 출신”

신정훈 새정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임원진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지난 30일 여수광양과 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현직 사장 15명 중 9명(60%)이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이었다. 또 상임이사인 본부장은 36명 중 17명(47%)이 전·현직 임원진의 51%가 해수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 출신 3명이 부산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등에 각각 임명됐다.

항만공사별로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전·현직 임원 16명 중 10명(62%)이 해수부 출신으로 4개 항만공사 중 비울



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1년 가장 늦게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현직 임원 6명 중 3명, 부산항만공사는 18명 중 8명, 울산항만공사는 11명

중 5명이 각각 해수부 출신이었다. 항만공사별로 전·현직 사장들의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5명 중 3명, 인천항만공사는 4명 중 3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명 전일, 울산항만공사는 4명 중 1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신 의원은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공개모집하면서 임명권자에게 복수추천을 하고 있는데도 해수부 출신이 절반을 넘고 있고, 특정자리는 독점까지 하고 있다”면서 “항만공사가 해수부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총선 출마지역 놓고 ‘갑론을박’

혁신위 “부산으로”...강기정·송호창 “수도권 나가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불출마를 선언한 문 대표에게 부산출마를 요구하며 불씨를 던진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수도권 출마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의 전략적 판단이 당연히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문 대표가 지역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도 “문 대표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와야 한다”고 거듭었다. 송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부산이 전략지역이 된 적은 없다. 항상 서울에서 일어나 표를 얻느냐가 전국 상황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문 대표도 서울로 와서, 가장 중심적인 정치 1번지에 가서 강력한 여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당원들은 중심으로는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부산에 동남출마해 영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역시 부산시장 지역위원장과의 오찬에서 “여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산에서 같이 뛰는 지역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아준다면 부산 위원장들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에 비판적인 비주류 진영 내에서도 부산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주류인 황주홍 의원은 PBC라디오에서 “대선 당시에는 지역구를 포기하지 못했다가 패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문 대표는 당연히 원래 지역구인 부산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문 대표의 ‘호남출마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새정치연합 주류 측은) 저에게 호남 민심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광주에 내려와 출마했으면 좋겠다”며 “저와 함께 출마해 영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